

EU Brief

| EU 동향 |

- 융커 EU집행위 체제 출범의 의미
New European Commission under Juncker and its Implications
- ECB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와 한계
ECB's liquidity measures: Potential Effects and Limits
-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신 현황과 전망 – 10월 총선을 즈음하여
Ukraine Crisis: Latest Developments and Prospects
-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M&A 확대 배경 및 추진 전략
Japanese companies' M&A in Europe
- 떠오르는 EU의 실리콘밸리
EU's ICT Hub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융커 EU집행위 체제 출범의 의미 002 New European Commission under Juncker and its Implications
	EU Economy ECB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와 한계 004 ECB's liquidity measures: Potential Effects and Limits
	EU Politics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신 현황과 전망 – 10월 총선을 즈음하여 008 Ukraine Crisis: Latest Developments and Prospects
	Trade & Investment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M&A 확대 배경 및 추진 전략 013 Japanese companies' M&A in Europe
	Industry Trends 떠오르는 EU의 실리콘밸리 019 EU's ICT Hubs
	EU Law EU의 에너지 소비 규제 024 EU Energy Efficiency Directive
	Social Issues 살 속의 문화, 음악 in Europe – 유럽 3대 클래식 축제 027 Europe's Three Major Classic Festivals
	Report Review EU 회원국의 종합혁신지수(2014) 030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4
	EU Centre News 제3차 한-EU 협력 포럼 세미나 개최 032 The 3 rd Regional Diversity & Growth Forum



윤커 EU집행위 체제 출범의 의미

New European Commission under Juncker and its Implications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under Jean-Claude Juncker, the President-elect, will take office on November 1st. Juncker finished selecting the new members of the Commission on September 10 and the features of the new Commission presented by him are as follows:

First, the new Commission consists of 28 members including Juncker himself, 6 Vice-President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Apart from the area of diplomacy and security policies, 6 Vice-Presidents oversee the work of 20 Commissioners. To be more specific, the Vice-Presidents supervise the following duties of project teams: ① employment, growth, investment, and competition, ② digital single market, ③ energy partnership, ④ intensification of economic/currency partnership, ⑤ regulation, inter-EU agency relation and basic human rights, and ⑥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In addition, First Vice-President is appointed among the 6 Vice-Presidents so that he can supervise the general affairs of the Commission, a system that is similar to country's government cabinet.

Second, the Juncker Commission consists of pro-European moderates in reflection of the result of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t the end of May. Among the 28 Commissioners, 14 are from EPP, 8 from S&D, 5 from ALED, and 1 from ECR. To promote unity, members from S&D, which occupies the second largest posi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were appointed as the chief Vice-President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other Vice-Presidents include 3 from EPP and 2 from ALDE. The appointment of pro-European Commissioners reflects Juncker's wish to create 'a college' in which members work towards a common goal rather than engage in ideological warfare.

Third, Juncker Commission places importance on the Commissioners' administrative experience as well as their expertise in economics, finance, and diplomacy. The Commission consists of 5 former prime ministers, 4 former deputy prime ministers, 7 former EU Commission members, and 8 European Parliament members; 11 are experts in economics and finance and 8 in diplomacy; and 9 are women, three of whom are Vice-Presidents. Deputy persons are as young as 49 on average, bringing drive and energy.

Juncker Commission can be considered as groundwork to bolster EU's competitiveness, strengthen their bond by reversing anti-EU sentiments, realise higher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establish stability. In other words, the new Commission is set up to undertake fiscal adjustment in times of fiscal crisis as well as promot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However, obligations among divisions and departments are duplicated, which may cause unnecessary competition and deteriorate the work efficiency of the Commission. For instance, some point out that Pierre Moscovici, the former Minister of Finance in France and now the Commissioner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may be an experimental element for the Vice-President system.

What the EU currently needs is a strong leadership - a leadership to address (i) internal issues such as anti-EU sentiments exemplified by the advance of populist parties and the talk of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 and (ii) external issues such as relationship with Russia who is turning out to be a dangerous neighbour. We hope to see the new Commission under Juncker rise up to these challenges and achiev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s well as external stability. ★

Yongdae Shin, a Chair Professor at Kunkuk University

장 클로드 윤커 체제의 EU집행위원회가 11월 1일 출범한다. 윤커 차기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새로운 집행위 조직과 함께 집행위원 인선을 마쳤다. 윤커 차기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집행위원회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집행위원회 조직은 지난 7월 15일 윤커 차기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설에서 설명한 정치적 가이드라인(Political Guidelines)을 구체화하여 본인과 6명의 부위원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 Federica Mogherini)를 포함한 28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제외하고 6명의 부위원장이 이 분야를 나누어 나머지 집행위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부위원장은 ① 고용, 성장, 투자 및 경쟁, ② 디지털 단일시장, ③ 에너지 동맹, ④ 경제·통화 동맹의 심화, ⑤ 규제, EU 기관 간 관계 및 기본인권, ⑥ 외교·안보정책 등 프로젝트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집행위원들이 업무 추진 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6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수석 부위원장(Frans Timmermans)을 두어 집행위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단일정부의 내각(cabinet)체제와 유사한 집행위를 구성하였다.

둘째, 윤커 체제의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하순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친(親)유럽중도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전체 28명 집행위원들의 출신정당별 분포는 14명이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 8명이 중도좌파인 사민당(S&D), 5명이 유럽자유민주당(ALDE), 1명이 보수주의적인 보수개혁당(ECR)이다. 윤커 차기 위원장은 자신이 유럽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화합 차원에서 수석부위원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분포를 가진 사민당 인사를 발탁하였다. 나머지 부위원장도 유럽국민당 출신 3명, 유럽자유민주당 출신 2명 등으로 구성하여 정당 간 안배를 고려하였다. 친유럽중도와 중심의 집행위원 인선은 윤커 차기 집행위원장이 EU집행위가

정파 간 정쟁을 일삼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협의회(college)가 되기를 바라는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윤커 집행위 체제에서는 집행위원들의 과거 행정경험과 경제·금융·대외관계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였다. 5명의 전직 총리, 4명의 전직 부총리, 19명의 전직 각료, 7명의 전직 EU집행위원, 8명의 유럽의회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체 28명 가운데 11명이 경제·금융 전문가이며, 8명이 대외관계 전문가들이다. 집행위원 전체의 3분의 1인 9명이 여성위원이며, 이 가운데 3명이 부위원장이자. 부위원장의 평균연령은 49세로 젊어 상대적으로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

윤커 집행위 체제의 구성은 EU집행위를 보다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조직하여 EU의 경쟁력을 높이고, 반(反)EU 정서를 다독여 결속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실현하고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EU가 직면해 있는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강한 EU집행위를 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는 부서 간의 업무가 중복되어 EU집행위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에 임명된 전 프랑스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가 부위원장 체제에 대해 실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EU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재정위기의 여파로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과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 등의 반EU 정서가 흐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위협적인 이웃으로 변모하는 러시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EU집행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커 체제하의 차기 집행위원회가 이와 같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내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등 EU의 경제사회 안정을 이루고, 대외 안정도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



ECB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의 기대효과와 한계

ECB's liquidity measures: Potential Effects and Limits

Since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economic indicators such as PMI have been trending downwards, which indicate the possible double dip in Eurozone economy. With weak signals of economic recovery due to low employment rates and continued credit crunch, the rising conflict against Russia resulting from the issue of Ukraine had negative effects on investment and consumer sentiments. On September 4th, ECB lowered its forecast on economic growth of Eurozone. In a meeting of the Governing Council held on the same date, ECB lowered the policy for interest rate. Market experts point out that this unexpected measure of ECB to lower interest rates is a desperate attempt to prevent a deflation, expecting that ECB's action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Some analys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powerful monetary support and this measure will switch attentions of foreign currency managers and investors from Euros to the other currencies.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 단행

2014년 2/4분기 이후 PMI(구매관리자지수)를 비롯해 각종 경기체감지수들이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경제가 재침체(더블딥)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 부진과 지속되는 신용경색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마저 성장세 둔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4일 ECB는 월례동향보고서(Monthly Bulletin)에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였다. 2014년 경제성장률을 1.0%에서 0.9%로 낮추는 한편, 2015년은 1.7%에서 1.6%로, 2016년은 1.8%에서 1.9%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또한 2014년 물가상승률을 0.7%에서 0.6%로 하향 수정하고, 2015년과 2016년의 물가상승률을 각각 1.1%, 1.4%로 전망하였다.

ECB는 같은 날 열린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였다. 전문가들의 금리 동결 예상과 달리 ECB는 정책금리(Refinancing rate)를 종전의 0.15%에서 0.05%로 인하하였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금리인하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CB는 예치금리(Deposit rate)를 -0.1%에서 -0.2%로,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rate)를 0.4%에서 0.3%로 인하하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ECB의 금리인하 조치를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이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앞으로 ECB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신호탄'이라는 견해와 함께 예치금리 인하는 외환보유고 관리자 및 외환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로화에서 다른 통화로 돌리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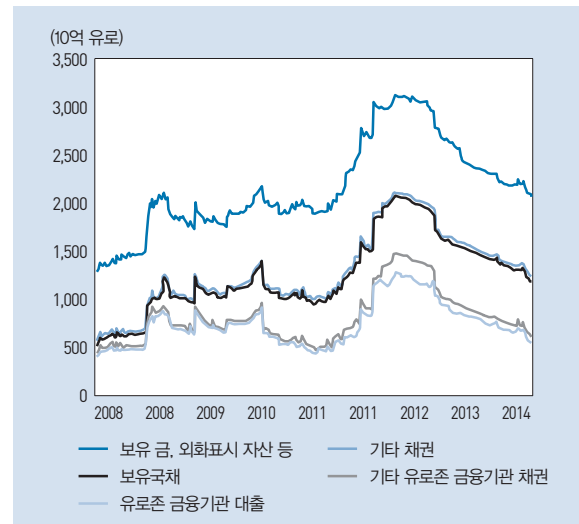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자산매입도 실시

ECB는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기업 및 소비자심리가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¹을 실시하고 ABS(자산담보부증권) 매입 준비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ECB는 디플레이션 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한편,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다. ECB가 동원하려는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는 TLTRO 시행, ABS와 커버드본드(Covered Bond)² 매입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ECB는 대차대조표(B/S) 규모를 현재의 2조 유로에서 최대 3조 유로까지 늘릴 방침이다. ECB의 대차대조표는 1조 유로 규모의 LTRO를 시행했던 2012년 중반에 한때 3.1조 유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¹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²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

★ ECB의 대차대조표(자산) 추이



자료: ECB

1차 TLTRO는 실망스러운 수준

지난 9월 18일에 ECB는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로 1차 TLTRO를 실시하였다. TLTRO는 3년 전 시행된 LTRO(장기 저리 은행대출)와 유사한 장기 자금대출³로, 실물부문(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회복을 겨냥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ECB는 올해 두 차례의 TLTRO를 통해 최대 4,00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1차 TLTRO 신청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382개 은행(은행단 포함) 중 255개 은행이 1차 TLTRO로 총 826억 유로를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는 ECB의 당초 목표치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1차 1,000억~1,500억 유로, 1~2차 3,000억 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런 규모였다.

은행들의 대출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최근 유로존 경제전망 악화, 10월 하순 발표될 ECB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한 부담, 독일 등 중심국 은행의 참여 저조,

³ 대출 만기는 4년이며, 연간 대출금리는 0.15%(기준금리+0.10%)임. 민간대출을 늘리지 않는 은행들은 2년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마이너스 예치금리 실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량은행들은 TLTRO 신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⁴, 이탈리아(750억 유로)⁵와 스페인(540억 유로)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12월로 예정된 2차 TLTRO에서는 최근 대출수요 회복세, 스트레스테스트 종료, LTRO 상환수요 등으로 인해 1차 TLTRO보다 신청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LTRO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대출 활성화는 기대안

ECB는 TLTRO가 민간대출을 활성화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실물경제 회복 및 디플레이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TLTRO를 통한 저리 장기조달에 힘입어 은행권 대출 기준이 추가 완화되겠지만,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아 획기적인 대출 확대에 이어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의 대출수요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⁶ 예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2012년 재정위기 때와는 달리 최근의 은행 대출 부진이 유로존 경제개혁 지연, 디플레이션 압력,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LTRO 자금은 민간대출보다 기존 채무 차환이나 신흥국 투자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2015년 초 1, 2차 LTRO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1~2차 TLTRO 대출의 상당분⁷이 차환(roll-over)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⁴ ECB의 은행 자본건전성 평가작업(Comprehensive Assessment)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행들은 TLTRO 신청을 꺼릴 수밖에 없음(Karel Lannoo, 벨기에 싱크탱크 CEPS 소장).

⁵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Unicredit)는 77.5억 유로(전체 9%)를 신청하였음.

⁶ 유로존 은행들의 민간대출 증가율은 2014년 6월 -1.8%에서 8월에 -1.5%로 소폭 개선되었음.

⁷ 7월 말 기준 LTRO 미상환 잔액은 약 3,480억 유로로, 이 중 80% 이상이 이탈리아, 스페인 은행들이며, 1차 TLTRO 자금의 다수를 양국의 은행권이 차지하고 있음.

10월 이후 ABS와 커버드본드 매입에 착수

ECB는 지난 9월 4일 정책이사회 회의에서 ABS와 커버드본드 매입을 통해 추가 부양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0월 2일에 실시된 정책이사회에서는 이달 중순에 커버드본드를, 올해 4분기에 ABS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9월에 TLTRO가 실시되는 만큼 동 제도의 효과를 지켜본 후에 자산 매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바이드만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ECB의 정책금리 인하와 ABS 매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는 TLTRO와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을 통해 ECB의 자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sizeable impact on balance sheet)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시장에서는 ECB가 자산 규모를 과거 최대 수준인 3.1조 유로까지 늘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자금수요 부족 등으로 은행 대출경로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있고, ABS 및 커버드본드의 유럽시장 규모가 미국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매입을 시행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CB의 자산매입 후보

(단위: 십억 유로)

	ECB 적격담보 잔액(기설정된 담보 제외)	시장 예상 (ABS/커버드본드)	장단점
국채	6,586	-	대규모 매입 가능하나 정치적 이견, 불확실한 경제효과, 법리 문제가 존재
ABS	383	200~250	ABS 시장 회복에 기여, 다만 규모가 작고 RMBS 제외 시 규모가 더욱 축소
커버드본드	1,128	160~200	시장규모 비교적 큼
은행채 (uncovered)	2,010	-	시장규모 크나 신용위험 잠재
회사채	1,315	-	신용위험 잠재

주: 2014년 2/4분기 말 ECB 적격담보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2014.9.19), "유로존 TLTRO 평가 및 대규모 자산매입(OE) 가능성 점검."

국채 매입 가능성도 거론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850억 유로 규모로 예상되는 세 가지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로 인해 ECB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6,35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치만으로는 ECB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1조 유로의 자산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TLTRO 시행과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CB는 국채 매입이라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심화될 경우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국채 매입이 주변국의 재정개혁 유인을 약화시키는 등 모럴해저드를 야기하고, 간접금융(은행대출)이 발달되어 있는 유로존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타이밍까지 놓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기 총재는 8월 잭슨홀 콘퍼런스 이후 '필요시 양적완화'를 시사했으며, 독일 라우텐슈레거(Lautenschlaeger) 집행위원도 '디플레 당면 시 긴급수단'으로서 양적완화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동성 공급 확대로 유로화 약세 지속 예상

ECB가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인플레이션 및 경기 추이가 중요하고, 독일(연방은행)의 반대와 법리 문제⁸ 등의 장애요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국채 매입(OMT)의 전제조건인 회원국 정부의 긴축 및 구조개혁 의지도 중요하다.⁹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양적완화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IB들은 최대 1조 유로 규모의

⁸ 독일 경제학자들은 ECB의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프로그램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회원국 재정을 지원해서 안 된다'는 리스본조약 제 123조에 위배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으며, 독일 헌법 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최종 판결을 요청해놓은 상태임.

⁹ ECB는 국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해당국 정부에 긴축 및 구조개혁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규정.

국채 매입이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2015년에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설 확률을 60%로 예상하고 있다.

ECB는 유동성 공급 확대가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출경기 부양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로화 환율은 지난 5월 이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월 26일 현재 유로화 환율은 1.26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6일의 최고치(1.393달러) 대비 무려 8.9% 하락한 수준이다. IB들은 유동성 공급 확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유로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2015년 중반에는 유로화 환율이 1.2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국 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유로화 환율이 1.17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계 자금이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012년 당시 유로 캐리 트레이드는 유로존 역내 투자에 집중되었다. 2012년에 유럽 은행들은 ECB로부터 LTRO 자금을 대출받아 고금리의 남유럽 국채에 투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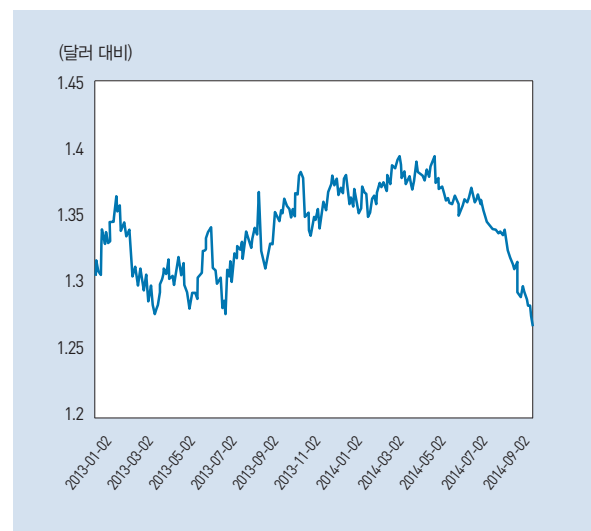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 당시 시중 은행들은 3,200억 유로의 자금을 국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높은 국채금리(예: 2012년 스페인 국채의 평균 수익률 3.6%)와 대출금리(1%)의 차이를 노린 캐드 트레이드였다.

2014년 하반기 들어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ECB가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성이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저금리의 장기화는 캐리 트레이드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14년에는 2012년과 달리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역내 투자보다 해외(신중국) 투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져 국채 투자의 매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유럽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ECB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 유럽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6월과 7월에 각각 985억 원, 6,254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는데, 금년 들어 4월을 제외하고 줄곧 매달 1조 원 이상 팔아 치웠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7월 말 현재 유럽계 자금은 유입 외국인 자금 중에서 미국(39.2%)에 이어 2위(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ECB의 정책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앞으로 ECB의 계획대로 적어도 6,000억 유로 이상의 유동성이 풀린다면 적지 않은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LTRO 시행 직후인 2012년 1~3월에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 6조 7,000억 원가량 유입된 바 있다.

저리로 유동성을 확보한 유럽 투자자들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로화 가치의 추가 하락,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한 매력 등으로 한국 등 신흥국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CB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은행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럽계 자금의 향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신 현황과 전망 – 10월 총선을 즈음하여

Ukraine Crisis: Latest Developments and Prospects

Since November 2013, when President Yanukovich announced the tentative suspension of the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Ukraine and EU, a series of events took place over Ukraine including large-scale demonstration,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Yanukovich, Russia's acquisi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and economic sanctions until it experienced a lull with the armistice concluded on September 5th, 2014. EU and the U.S., however, are strengthening their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n response, Russia continues to be in confrontation. In the eastern part of Ukraine, shots still ring out intermittently.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 in October, and the settlement of conflicts regarding the right of autonomy over the eastern region may either aggravate or suggest a solution for the Ukrainian situation.

불안한 휴전이 유지되는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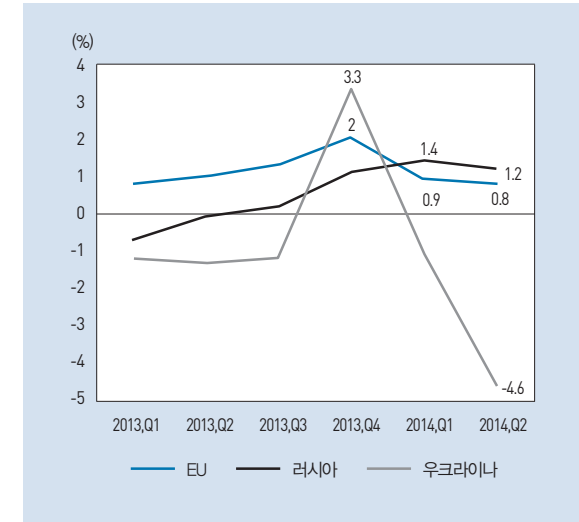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협상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이후 대규모 시위 발발,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경제 제재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어온 우크라이나 사태가 2014년 9월 5일 휴전으로 모처럼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휴전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반군에게 약속한 동부의 특수지위법 제정, 반군 사면 등의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올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다. 또한 동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간헐적으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엔 상임외교관 유리 세르헤예브는 9월 5일 휴전 이후부터 9월 19일까지 반군과 러시아군이 휴전을 위반한 사례가 480건이나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공무원 13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¹. 동시에 우크라이나 야당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입안한 동부 자치법과 반군 사면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렇듯 불안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10월 26일에 예정된 우크라이나 총선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총선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최근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선의 의미를 분석해 그 결과와 파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승자가 없는 전쟁, 모두가 피해자

10여개월 동안 악무한으로 치달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상처를 남겼다. 우선 이미 2012년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0%대 성장률(2012년 0.2% → 2013년 0.0%)을 보이던 우크라이나 경제의 성장률은 이번 사태로 인해 2014년에 -6%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경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201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4/4분기 2%에서 2014년 1/4분기 0.9%, 2/4분기 0.8%로 계속해서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러시아와의 마찰로 유럽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7월 말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럽 기업들도 2014년 400억 유로(GDP 0.3%), 2015년 500억 유로(GDP 0.4%)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13년 하반기부터 겨우 회복기에 들어서서 2014년 1/4분기에는 1.4%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2/4분기에 다시 0.2%p 떨어진 1.2%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2013년 4분기) 전후 경제성장 추이



자료: Eurostat; 러시아 중앙은행; Global Insight; CEIC; Trading Economics

불가피한 제재와 협상의 이중주

이렇듯 경제적 타격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 악무한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어느 한쪽, 특히 러시아 측의 양보가 없는 한 표면적으로는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휴전 이후 작금의 사태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 제재와 협상의 이중주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9월 5일 휴전 선언 이후에도 제재와 맞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군수 산업에 대해 보다 강하고 통일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안을 채택했다. 특히, 러시아 주도로 유럽 남부에 건설하고 있는 가스관인 '사우스 스트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폐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이 안이 실행될 경우 러시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9월 22일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푸틴 최측근 기업인인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의 부동산(3,000만 유로 규모)을 압류했다. 이에 반발하여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 소속 의원이 9월 25일 러시아 내에 있는 해외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 제출했다. 외교적 면책특권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러시아인이 해외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산을 압류당했을 때 그 책임자와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휴전 협상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EU 3자 간의 협상과 타협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9월 5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의 조건들이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국경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켰고, 동부 반군의 공세도 멈추었다. 동시에 9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등)의 자치권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12월 7일 조기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회와 관료들에게 지방정부의 기능을 위임하며 지방의회는 지역 민병대를 창설하고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을 임명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 등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러시아 정부와의 초국경적 협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동부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등 사실상 모든 권한이 지방 정부에 넘어가게 되어 말 그대로 독립적인 자치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같은 날 자치법과 함께 동부 반군에 대한 사면법도 통과시켰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협력협정에 대해서도 일련의 양보 조치를 취했다. 2014년 6월 포로셴코 대통령이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나, 9월 12일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EU 3자 협상에서 이 협정의 가장 핵심 사안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시기가 2015년 말까지 연기된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EU 간 자유무역이 시행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는데, 이로써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EU의 극단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여지가 생겼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중단되었던 우크라이나에

¹ Gorschenin Institute (2014), In The Spotlight, *Gorschenin Weekly*, 29(192).



대한 가스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9월 26일 열린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가스대금 미납금 지급 방식과 겨울 대비 가스 공급 개시를 위한 계약 조건에 대해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². 53억 달러의 밀린 가스대금 중 31억 달러는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지불하고, 잔금 22억 달러는 스톡홀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액수를 조정하여 지불하며, 31억 달러에 대한 지불보증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가 담당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겨울나기를 위한 별도의 가스공급 협상을 추진하여 1,000입방미터 당 385달러의 가격으로 50억 입방미터, 즉 총 19억 달러 어치를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량을 120억 입방미터로 늘리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잔금 지불 방법과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미세한 이견이 존재하여 향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기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타협 가능성이 커졌지만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한 동부 자치법안에 대해 러시아와 EU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완전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반군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국당과 자유당 등 우크라이나 내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당 당수 올리아 티모셴코는 이 법안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테러리즘과 영토점령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당 당수 올레 타니복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른바 독재법³에 서명했던 1월 26일로 역사가 되돌아갔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디지털 투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² Under Pact, Russians to Give Gas to Ukraine. (2014.9.26.). *The New York Times*.

³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가 협력협정 협상을 중단한 다음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자 2014년 1월 26일 당시 여당인 '지역당'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

반면, 포로셴코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며 국제적 지원도 얻을 수 있게 한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법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은 이미 7월 24일 포로셴코 중심의 연정이 깨지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때 포로셴코와 함께 '유럽 선택'이라는 정당연합체로 연정을 형성하고 전 대통령 야누코비치를 축출하였던 우다르당과 자유당이 포로셴코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연정에서 탈퇴했다. 그 이후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로셴코 주도의 대리시아 협상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포로셴코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보다 우선적으로 이 내부의 적, 즉 국론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연정 붕괴 이후 결국 한 달간 연정 재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포로셴코 대통령은 8월 26일 의회를 해산하고 10월 총선을 선포했다. 10월 26일로 예정된 총선은 바로 이 국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선에서 '포로셴코 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포로셴코 대통령은 정국 타개와 함께 러시아와의 협상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로셴코 블록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포로셴코의 대외정책을 지지해줄 정당과 연정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의 총 450석 중 226석 이상을

★ 10월 총선 주요 정당별 예상 지지율

조사 기관	(단위: %, %p)									
	조국	우다르	자유	공산	포로셴코	금진	시민입장	강한우크라이나	인민전선당	1.2위차이
Active Group	6.3	-	4	2.9	40.8	11.7	8.2	4.7	6.6	29.1
UISPP (NAPS)	7.9	4.6	4.6	4.2	31.5	12.7	6.6	6.3	8.1	18.8
SOCIS	8.1	[c]	4.5	2.9	45.7	13.7	8.1	4.4	5.6	33.3
KIIS	6.1	[c]	4.4	4.6	37.1	13.1	9.7	7.8	6.4	24.0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차지해야 하는데, 최근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로셴코 블록은 비록 2위 정당을 최대 33%라는 큰 차이로 앞서겠지만 최대 45% 정도를 차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포로셴코 블록이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여론조사가 동부 지역을 완전히 제외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10월에 포로셴코 블록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1야당이 될 조국당의 몇몇 인사가 탈당 후 포로셴코 블록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정치 판도에서 포로셴코 블록이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정당들과 연정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포로셴코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는 그와 대부분의 정책에서 의견을 같이 하는 전 총리 야체뉴크와 하원의장 투르치노프가 함께 결성한 인민전선당과 연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포로셴코 블록은 최대 45.7%, 인민전선당은 8.1%를 차지하여 숫자상으로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러나 포로셴코 블록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야체뉴크와 투르치노프가 9월 13일에 포로셴코 블록과의 분리를 선언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들과의 연정이 반드시 포로셴코에게 장밋빛 미래를 열어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로서는 포로셴코 블록과 인민전선당이 최대 득표에 실패하여 조국당이나 우다르당과 연정을 형성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⁴. 이와 같이 10월 총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타협을 통한 해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국론 분열로 인해 러시아 및 동부 반군과의 타협이 힘을 잃고 또다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다.

EU 가입은 Yes, 나토 가입은 No

10월 총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이 결정되겠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과 상관없이 동일한 전망을 하고 있다.

⁴ THE Razumkov Centre (2014.9.11.). A SINGLE PARTY WILL FORM THE MAJORITY IN THE NEW PARLIAMENT. NEWSLETTER No4.

먼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유럽인들의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아졌다. 9월 10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실제로 우크라이나 의회와 유럽의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친(親)러시아 경향의 '지역당'이 사라지면서 친유럽 정당들로 채워진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9월 16일 「우크라이나의 유럽 선택(European Selection)에 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EU 가입을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이를 뒤인 9월 18일 유럽의회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적 시각(European Perspective)을 가지고 있으며 EU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EU 가입 전 단계로 2015년 5월로 예상되는 비자 면제조치 시행을 위한 실무단이 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자치권을 얻고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잃을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러시아도 반쪽이나마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업지대를 얻는 것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동부 지역이 자치권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좀 더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EU 가입과는 달리 나토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EU 가입에 찬성했던 다수의 유럽인들은 나토 가입에는 반대하고 있다(찬성 46%, 반대 47%).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아직은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에 조국당이 나토 가입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거절한 바 있는데, 이는 포로셴코

⁵ Most Europeans in poll think EU should offer Ukraine membership. (2014.9.10.). *Reuters*.



정부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굳이 지금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적 동맹이 아닌 EU 가입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 군사적 동맹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토 가입을 추진할 경우 동부 반군의 군사행동이 재개될 위험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측이 계속해서 서방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즉,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서방국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속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인 군사지원이 크로아티아의 헬리콥터 지원에 불과하다. 포로센코 대통령이 직접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이 지원해준 담요와 야간 투시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담요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과 함께 고작 4,600만 달러 상당의 카운터 박격포 탐지 레이더 등 비(非)무기 장비 지원을 약속했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등 서방의 지도자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나토 가입보다는 보다 우회적인 연대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 가입의 전 단계라는 미명하에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에게 ‘비(非)나토 주요 동맹국’ 지위를 줄 것을 약속했다. 비나토 주요 동맹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주요 전략 동맹국들에게 부여하는 지위로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 15개 국가가 이에 속한다.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및 무기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지위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불과하며 실제로 미국이 이 지위를 부여할지는 불확실하다. 9월 15~26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미국 등 15개국 합동 군사훈련 ‘Rapid Trident’도 나토 차원이 아니라 나토를 우회한 국제적 군사 연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단원에 대비할 필요

10월 총선 결과, 그리고 동부 지역의 자치권에 대한 이견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국 모두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타협을 통한 해결의 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던 우크라이나의 가스공급 재개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러시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10월 총선 결과와 향후 관련국들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단원을 맞이할 준비를 서서히 할 필요가 있다. 접었던 투자와 시장 진출의 패를 이제 다시 꺼내어 누구보다 적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사전 포석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M&A 확대 배경 및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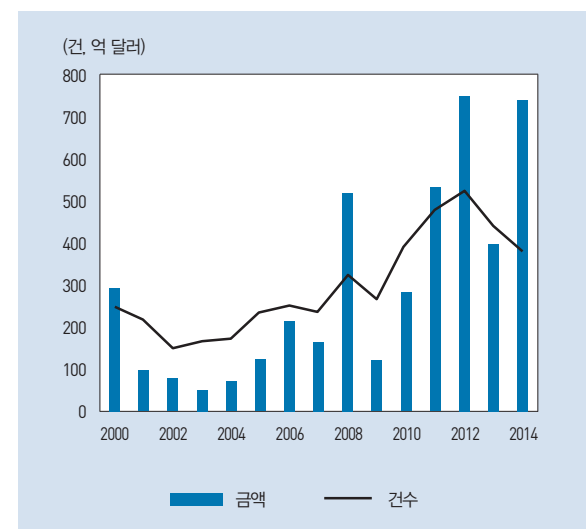
Japanese companies' M&A in Europ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overseas M&A conducted by major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Germany, and France decreased by 15 to 30% per year whereas Japan increased by 62% during the same period. In terms of overall M&A value, M&A by the former group of countries decreased 30 to 70% during that period while that of Japanese companies increased by 66%. In contrast to the constantly bleak world M&A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overseas M&A of Japan has drastically increased.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A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구미 주요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건수가 위기 이전에 비해 연평균 15~30%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 기업은 같은 기간 M&A 건수가 62%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구미 주요국은 30~70% 줄어든 반면, 일본은 오히려 66%나 늘어났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기업의 해외 M&A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만 해외 M&A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A 추이



자료: Thomson One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의 연평균 해외기업 M&A 추이

(단위: 건, 억 달러, %)

	건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위기 이전	위기 이후	
미 국	2,080	1,755	-16	2,178	1,353	-39
영 국	1,128	789	-30	1,428	893	-37
독 일	533	420	-21	865	232	-73
프랑스	513	413	-19	946	395	-58
일 본	258	418	62	249	414	66
중 국	168	278	65	252	462	83

주: 위기 이전은 2005~2008년, 위기 이후는 2009~2013년
자료: Thomson One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A 확대 배경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A 확대는 첫째, 엔고(高)와 관련이 높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진행된 엔고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을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핵심 변수였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고가 지속되면서

1 2010년 9월 15일,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6년 6개월 만에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2011년 4차례에 걸쳐 14조 2,977억 엔을 투입해 엔고 저지를 시도하였음.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엔고는 해외 기업 또는 경영자원을 매입하려는 일본 기업에게는 커다란 무기가 되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한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외 기업이나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연평균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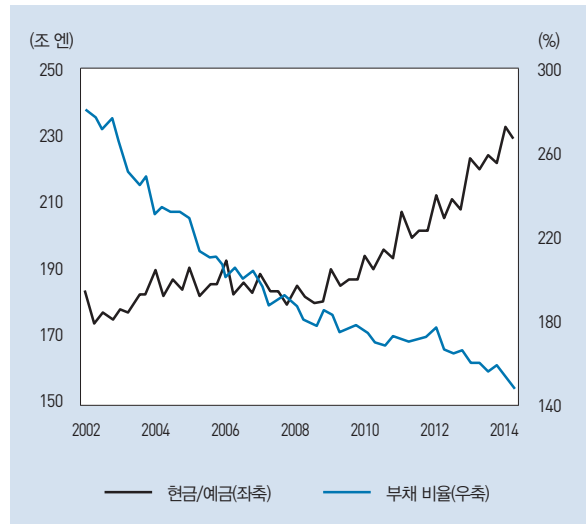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16.3	117.8	103.3	93.6	87.7	79.8	79.8	97.6

자료: 일본은행

둘째,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 축소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시장의 최대 25%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장이 축소되는 일본 내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업종에 따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 터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축소되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를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농업, 의료 등 분야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가 지지부진하여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기업 M&A는 단기간 내에 해외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셋째, 일본 기업의 풍부한 자금 여력을 들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기관에 의존한 자본조달보다는 회사채나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을 점차 선호하게 되었다. 동시에 은행자입을 통한 투자를 자제하고 오히려 영업활동에서 획득한 이익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주력하였다.

★ 일본 기업의 현금보유액 및 부채 비율 추이



자료: 일본은행,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통계(法人企業統計)

심지어 사채나 주식으로 조달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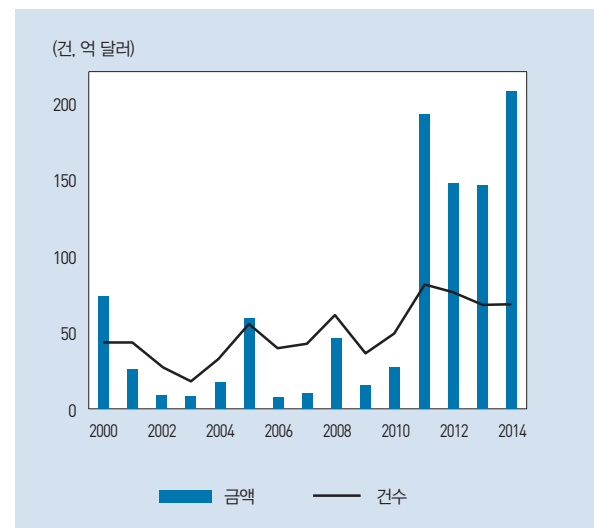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 기업의 재무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거액의 자금 축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6월 말 현재 일본 기업(민간 법인기업 기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포함) 보유액은 229조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넷째, 일본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해외 M&A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9월,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및 해외 자원 개발권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외환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여 시장금리 이하의 저금리로 기업에 융자하는 '달러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은행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외 기업 M&A 관련 융자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하여 지원하였다. 실제 소니가 영국 휴대폰 기업 소니에릭슨을 100퍼센트 자회사화하고, 도시바가 스위스 스마트미터(차세대전력계) 업체 랜디스기어(Landis & Gyr)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액을 동 제도를 활용하여 조달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황 여파로 값싸게 나온 매물이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 지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기업의 시장가치가 낮아졌고, 구조조정 압력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던 일본 기업들에게 유럽의 유망 기업을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건당 1억 6,700만 달러였던 일본 기업의 대(對)유럽 M&A의 규모가 2011년 이후에는 5억 2,600만 달러로 세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대형 M&A에 해당하는 5억 달러 이상의 M&A 건수도 2000~2010년에는 연평균 1.5개 정도였으나 2011년 4건, 2012년 10건, 2013년 7건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유럽 M&A 건수가 늘어나면서 한 건당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기업이 대유럽 M&A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M&A 추이



자료: Thomson One

업종별 유럽 기업 M&A

일본 기업이 추진한 해외 M&A를 업종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전기전자/IT, 소재, 제약/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M&A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본 기업의 주요 업종별 M&A 비중(건수 기준)

(단위: %, %p)

	위기 이전(A)	위기 이후(B)	차이(B-A)
전기전자·IT	15.8	21.2	5.5
통신장비·서비스	3.2	1.5	-1.7
산업재	19.2	15.3	-3.9
소재	19.0	22.8	3.9
환경·에너지	9.5	9.4	-0.1
제약·헬스케어	6.2	8.1	2.0
기타	27.3	21.7	-5.6
합계	100	100	0.0

주: 위기 이전은 2005~2008년, 위기 이후는 2009년 이후
자료: Thomson One

★ 일본 기업의 주요 업종별 유럽 기업 M&A 비중(건수 기준)

(단위: %, %p)

	위기 이전(A)	위기 이후(B)	차이(B-A)
전기전자·IT	15.0	15.2	0.2
통신장비·서비스	2.5	1.7	-0.8
산업재	16.5	26.7	10.2
소재	11.5	10.4	-1.1
환경·에너지	8.0	8.1	0.1
제약·헬스케어	6.0	9.0	3.0
기타	40.5	28.9	-11.6
유럽 합계	100	100	0.0

주: 위기 이전은 2005~2008년, 위기 이후는 2009년 이후
자료: Thomson One





이 중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와 제약·헬스케어 관련 업종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환경·에너지 관련 업종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는 자동차부품, 제약·헬스케어, 환경·에너지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강점이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의 매수 타깃도 동 분야의 유망기업에 맞춰졌음을 시사한다.²

유럽 내에서 지역별로 구분해볼 때, 일본 기업의 M&A는 전통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경제 강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하면, 서유럽 경제 강국의 비중이 줄고³, 재정위기국 비중은 늘어났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재정위기국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압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으며, 동시에 저가 매물로 시장에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일본 기업의 주요 업종별 유럽 기업 M&A 비중(건수 기준)

(단위: %, %)

	위기 이전	위기 이후	대상 국가
경제 강국	72.0	62.6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재정위기국	7.0	16.0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기타	21.0	21.3	-

주: 위기 이전은 2005~2008년, 위기 이후는 2009년 이후
자료: Thomson One

² 대(對)미국 기업 M&A의 증가폭을 크게 하회. 위기 이후 미국 기업 M&A에서는 전기전자/IT 비중이 위기 이전 대비 3.7% 증가.

³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기업의 M&A 건수(연평균) 자체는 증가하였음.

일본 기업의 유럽 기업 M&A 목적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을 M&A하는 이유는 주력 사업 강화를 위한 기술, 판매망, 생산거점 확보와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신기술 및 자산 확보, 취약기술 보완 및 신흥국 공략 강화, 안정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 당해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각색이다.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다만, 유럽 기업이 자동차, 화학소재, 환경·에너지, 제약·헬스케어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 분야의 M&A는 기존 사업 강화 또는 신사업 추진 관련 신기술 확보를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럽 기업 중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공략을 위한 유통망 확보 목적으로 대형 M&A를 추진한 사례도 눈에 띈다.

신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형 M&A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시바의 랜디스기어 매수를 들 수 있다. 도시바는 2011년 5월, 23억 달러(약 1,900억 엔)를 투입하여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송전망) 관련 기업인 랜디스기어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였다. 당시 도시바는 원자력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설정해놓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국내 원전 신증설 계획이 취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을 조합해 전력을 고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탈리아 송변전 및 태양광발전 엔지니어링 기업 안살도(Ansaldo) T&D를 매수(2011년 3월)하는 등 발전소에서 공장 및 가정까지의 전력유통망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공격적인 대형 해외 M&A를 추진해오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세계 30여 개국에 거점을 보유하고 8,000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부품인 스마트미터(차세대 전력계)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랜디스기어를 매수하게 되었다.

도시바는 랜디스기어 매수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사업의 글로벌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전력 관련 시장은 국가,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현지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도시바의 수요자용 에너지 관리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랜디스기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망·서비스 사업 및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계량관리부터 서비스 영역까지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기술 확보 목적에서 추진한 대형 M&A 사례로는 무라타제작소의 VTI 테크놀로지 매수가 있다. 무라타제작소는 2011년 11월, 핀란드의 자동차 및 의료기기용 센서 업체 VTI 테크놀로지를 1억 9,500만 유로(약 200억 엔)에 매수했다. VTI 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 확보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의료용 시장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목적에서였다. VTI 테크놀로지는 3D MEMS 기술을 사용해 자동차산업과 의료기기 분야의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가속도센서 및 자이로센서, 공진기(共振器), 심장리듬 관리기기 (Cardiac Rhythm Managemen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의료기기용 센서 시장에서 당시 세계 1위 기업이었다. 무라타제작소는 VTI 테크놀로지를 매수함으로써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성장시장에 콘텐츠와 함께 MEMS 센서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무라타제작소는 VTI 테크놀로지의 MEMS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기타 IT 기기의 손떨림 및 가속도, 적외선 등을 측정, 검지(檢知)하는 초소형 센서를 개발할 목적이었다. 동시에 VTI의 강점인 차량 및 의료용 센서 시장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파나소닉이 스페인 자동차 부품업체 피코사(Ficosa)인터내셔널 매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기술을 확보해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파나소닉은 2015년 3월까지 2억 7,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피코사인터내셔널 주식의 약 50%를 매입할 계획이다. 피코사인터내셔널은 자동차 미러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도요타 등 세계 우수 자동차 업체에 관련 부품을 납입하는 1차 벤더로서 화상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TV 등 가전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놓았는데, 피코사인터내셔널 매수는 바로 이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파나소닉은 피코사인터내셔널을 매입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기존의 자사제품으로는 취약했던 유럽 자동차 업체 대상 판로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T와 자동차 산업 간 융합이 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부품회사와 전자업체 간 전략적 제휴 및 M&A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자동차 개념을 바꾸는 자동운전 기술에는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 등 이업종 기업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소닉은 차량탑재용 센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피코사인터내셔널의 미러 및 화상인식 기술과 자사의 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운전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자동운전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신흥국 공략 강화도 유럽 기업 M&A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다케다약품공업의 스위스 제약업체 나이코메드 매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케다약품공업은 2011년 5월, 96억 유로(약 1조 1,100억 엔)를 투입하여 나이코메드를 매수하였는데, 나이코메드가 보유하고 있는 후발 의약품 사업과 신흥국 판매망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나이코메드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제품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약과 후발 의약품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였다. 또한 세계 70여개국에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고, 동유럽, CIS, 중남미 등 신흥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흥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많은 국가에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채산성이 생겨나는데, 나이코메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다. 따라서 다케다약품은 나이코메드를 매수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신흥국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4년 초 파나소닉이 4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터키 배선업체 비코(Viko)의 지분 90%를 매수한 사례 역시 신흥국 공략 강화를 목적으로 한 M&A라 할 수 있다. 파나소닉은 비코를 매수해 터키 시장을 시작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배선기기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일본 기업의 공격적 경영에 대비

향후에도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A가 계속해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 추진 등에 힘입어 엔저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기업의 해외 기업 M&A의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일본시장 여건, 법인세 문제, 환경 문제, 노동규제, 전력문제 등 일본 기업을 둘러싼 국내 사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일본 기업들의 해외시장 중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는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방식과 M&A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A는 자사에 필요한 기술, 인수종사업, 유통망 등을 일거에 확보할 수 있는 공격적인 수단인데다, 자금력도 풍부한 만큼 향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필요한 경쟁원천이나 자원,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M&A를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필요한 기술, 사업 분야 확충 및 글로벌화를 위해 M&A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자국시장에서 급성장하며 자금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은 재정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유럽 기업을 표적으로 한 M&A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유럽 및 신흥국 기업 M&A를 둘러싸고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M&A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시간이 더욱 대형화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산업간 융합화의 진전으로 필요 기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잠재적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등한 공격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떠오르는 EU의 실리콘밸리

EU's ICT Hubs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Silicon Valley in San Francisco has produced endless number of innovative products and companies, taking the lead of global hightech industry. Although not as famous as Silicon Valley, there are innovative ICT hubs in Europe as well. In April 2014,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a paper indicating EU's ICT hub.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42 indicating in three major areas-ICT corporate activity, ICT R&D, and ICT innovative capability of 1,303 regions, 34 top ICT hubs were selected: These top ICT hubs include 3 regions in first tier(81~100 points), 8 in second tier(61~80), and 23 in third tier(41~60).

EU의 핵심 ICT 허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는 수많은 혁신 제품과 기업들을 배출해내며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을 주도했다. 아직 실리콘밸리 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럽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 허브가 다수 존재한다.

2014년 4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핵심 ICT 허브를 소개했다. 유럽의 1,303개 지역¹을 대상으로 ICT 기업 활동, ICT R&D, ICT 혁신역량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총 42개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34곳의 핵심 ICT 허브를 선정했다. 핵심 ICT 허브는 1군(81~100점) 3곳, 2군(61~80점) 8곳, 3군(41~60점) 23곳으로 구분된다. 종합지수 산출 결과 유럽의 산업 수도인 독일의 뮌헨, 영국의 동부 런던, 프랑스의 파리가 1군으로 선정되었다.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동부 런던, 다름슈타트, 그루트 암스테르담이, R&D 측면에서는 뮌헨, 카를스루에, 파리가, 혁신역량 측면에서는 캠브리지셔, 스톡홀름, 뮌헨이 1~3위를 기록했다. 핵심 ICT 허브는 EU 전체 회원국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개 EU 국가에 포진하고 있다. 이는 핵심 ICT 허브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다수의 허브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거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 ICT 허브로 선정된 영국의 동부 런던, 옥스퍼드셔, 버크셔, 쉼퍼는 모두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EU 회원국 정부는 넥스트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ICT 허브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EU의 핵심 ICT 허브 종합지수에서 1~3위를 차지한 지역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하려고 한다.

① 독일 뮌헨: 전통적 강자

EU에서 ICT 허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뮌헨이 유럽 '실리콘밸리' 역할을 담당하며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1993~1994년 독일(서독)이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냉전이 끝나자 뮌헨에 집중되어 있던 항공 및 방위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뮌헨이 위치해 있는 바이에른 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도전을 시도한다. 1993년부터 10년 동안 약 30억 유로 규모의 주정부 기업들을 매각하였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교육, R&D, 창업 지원에 쏟아부었다.² 주정부는1990년대 말 생명과학, ICT, 신소재, 환경 및 의료기술 허브를 목표로 한 '하이테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뮌헨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에 특화된 대학 및 연구소가 다수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이에 힘입어 뮌헨의 ICT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적 깊이(institutional thickness)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

² Invest in Bavaria (2005). Bavaria the site of choice.

³ How Bavaria became a European silicon valley. (2011.3.15.). *The Guardian*.





★ 유럽의 핵심 ICT 허브

순위	국가	ICT 허브
1	독일	뮌헨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2	영국	동부 런던
3	프랑스	파리
4	독일	카를스루에 슈타드크라이스
5	영국	캠브리지셔
6	스웨덴	스톡홀름
7	독일	다름슈타드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8	핀란드	우시마
9	네덜란드	주이도스트, 노르트브라반트
10	네덜란드	그루트 암스테르담
11	벨기에	루뱅
12	독일	본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13	프랑스	오드센
14	이탈리아	밀라노
15	독일	베를린
16	아일랜드	더블린
17	독일	아헨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18	네덜란드	델프트 앙 웨스트란트
19	영국	옥스포드셔
20	영국	에든버러
21	독일	슈투트가르트 슈타드크라이스
22	독일	하이델베르크 슈타드크라이스
23	독일	뮌헨 란트크라이스
24	벨기에	브뤼셀 캐피탈
25	덴마크	코펜하겐
26	영국	버크셔
27	오스트리아	빈
28	스페인	마드리드
29	영국	써리
30	독일	프랑크푸르트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31	영국	햄프셔
32	독일	에를랑겐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33	프랑스	이블린
34	독일	드레스덴 크라이스프라이에 슈타드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Mapping the European ICT Poles of Excellence: The Atlas of ICT Activity in Europe.

뮌헨의 강점은 ICT의 융복합에 있다. ICT 산업은 뮌헨의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의료기기 산업과 함께 성장했다. 뮌헨의 ICT 산업은 기계와 장비를 통제 및 작동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전통 제조업과 ICT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ICT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 BMW 그룹은 2001년 BMW Car IT를 설립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최근 뮌헨에서는 제조업을 뛰어넘어 스포츠 산업에서까지 ICT의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8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치가 높은 축구구단인 바이에른 뮌헨⁴은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선수들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3년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부상 시 회복을 돕기 위해 SAP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다.⁵

한편, 핵심 ICT 허브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한 베를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베를린이 ‘실리콘 알레’를 앞세워 유럽의 대표 스타트업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⁶ 향후 기존 ICT 강자인 뮌헨과 베를린의 스타트업 허브가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② 영국 동부 런던: 라이징 스타

영국 동부 런던은 유럽 ICT 산업의 라이징 스타 즉, 신흥자라고 할 수 있다. 런던 ICT 산업의 심장에는 ‘테크 시티’가 있다. 테크 시티는 동부 런던의 올드 스트리트와

⁴ The world's most valuable soccer teams. (2014.5.7.). *Forbes*.

⁵ Bayern Munich's SAP deal helps soccer players to fitness. (2014.8.19.). *Bloomberg*.

⁶ Next Silicon Valley? Berlin's battle to be a tech hub. (2014.3.30.). *BBC*.

올림픽 파크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올드 스트리트 라운더바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이름을 따 ‘실리콘 라운더바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테크놀로지 센터 육성은 2010년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수의 은행들이 정부 소유로 넘어가는 등 금융업이 망가진 상황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 테크놀로지 산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런던을 실리콘밸리의 대항마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당시 정부는 동부 런던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힘을 포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부 런던에 위치한 테크놀로지 신생기업 수가 2007년 15개에서 2010년 11월 100여 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⁷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인 Last.FM으로 2007년 미국 CBS 인터랙티브에 1억 4,000만 파운드에 인수되며 주목을 받았다. 테크 시티 내 기업 수는 2010년 말 200여 개에서 2011년 말 600여 개로 급증했고, 2014년 8월 말 현재 1,472개를 기록하고 있다.⁸ 시스코, 인텔, 쉘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보다폰 등 다수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테크 시티에 R&D 센터 및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실리콘 라운더바웃은 초기에는 눈에 띄는 정부의 지원이나 대학과의 협력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했다. 동부 런던 거주자들의 보헤미안 성향과 지리적 이점이 실리콘 라운더바웃 성장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⁹ 중앙 런던이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라면 동부 런던은 문화와 다양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동부 런던의

⁷ UK Government (2010.11.4.). Prime Minister's East End Tech City Speech. Press Release.

⁸ TECH CITY MAP <www.techcitymap.com/index.html#>

⁹ London's high-tech start-ups: Silicon Roundabout. (2010.11.25.). *Economist*.

자유분방한 성향이 소프트웨어 등 테크놀로지 산업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부 런던은 물가가 낮아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런던에는 금융,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ICT 기업들이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동부 런던은 시티 공항,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 기차역과 근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런던이 재개발된 것이 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⁰ 영국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는 세계 혜택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정부는 법인세율을 2011년 26%에서 2014년 21%까지 인하하였고, ‘씨앗기업투자제도’를 통해 10만 파운드의 초기 기업투자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세계 혜택을 200%에서 2012년 225%로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 특허로 확보하는 수익에 대해 세계 혜택을 제공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다. 기타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고성장 하이테크 기업의 증시 상장 패스트 트랙, 창업자 비자 제도 등이 있다. 2014년 3월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런던을 유럽을 넘어서 세계의 테크놀로지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¹¹ 교역의 허브에서 금융의 허브로, 그리고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허브를 꿈꾸는 런던의 행보가 기대된다.

¹⁰ UK Government (2012.12.6.). PM announces 50 million pounds funding to regenerate Old Street roundabout. Press Release.

¹¹ Greater London Authority (2014.3.14.). Mayor outlines vision to make London the tech capital of the world. Press Release.





③ 프랑스 파리: 캐칭업 허브

최근 프랑스의 자존심인 푸조와 알스톰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팔려나가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가 유럽의 차세대 스타트업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직물 거래의 중심지로 유명한 파리의 센티어 지역은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리콘 센터’라고 불려왔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기존 프랑스 주요 산업들의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ICT 스타트업의 육성지인 실리콘 센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3년 말 한국계 입양인인 펠르랭 당시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 경제 장관을 필두로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스타트업을 위한 특구 설립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2억 1,500만 유로 규모의 ‘라 프렌치 테크’ 계획을 발표하며 파리의 ICT 산업에 활기가 돌고 있다.¹²

파리의 ICT 허브 육성의 중심에는 프랑스의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 회장이 있다. 1990년대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 조기 진출하여 부를 축적한 니엘 회장은 프랑스 테크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지목된다. 니엘 회장이 설립한 일리아드가 2012년 프리 모바일이라는 초저가 무선통신사를 설립해 기존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프랑스 통신업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2014년에는 미국 T 모바일 인수전에 참여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2009년 노래 〈마이웨이〉의 판권을 매입하고, 2010년 일간지 『르 몽드』 인수에 참여하는 등¹³ 행보를 전망하기 힘든 니엘 회장이 이제 파리를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니엘 회장은 2013년 9월, 건설된 지 87년이 지났고 지금은 비어 있는 파리의 철도 창고 ‘La Halle Freyssinet’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1,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 ‘1000 Startup’에 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11월에는 18~30세의 학생 900명에게 소프트웨어 코딩을 무료로 가르치는 학교 ‘42’ 설립에 7,000만 유로를 투자했다.¹⁴

니엘 회장은 오래전부터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10년 니엘 회장이 설립한 키마 벤처스는 매주 최소 한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가장 활발한 글로벌 엔젤투자기관으로 유명하다. 사회당 집권 이후 허덕이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니엘 회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파리 스타트업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엘 회장은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긴축을 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정부에 부담이 되지 말자는 뜻이다.

1000 Startup 인큐베이터가 완공되는 2016년, 파리에 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탄생해 날개를 달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 불확실성에도 유의

재정위기에 이어 ‘성장위기’와 ‘실업위기’에 빠져 있는 EU의 주요국들이 ICT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는 제조업과의 융복합, 영국 런던에서는 서비스 산업과의 융복합을 발판으로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방트 프리베’와 같은 패션 관련 ICT 기업이 다수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기존 산업 수도인 이 세 곳 이외에도 수십 개의 도시 및 지역이 포스트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아이디어 상용화 인프라 구축, 벤처 투자 활성화,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최근에는 유럽의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유럽이 미국 ICT 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에서 신(新)러다이트 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하는데,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독점적 활동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규제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5월 EU 법원은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구글에 대응책 시행을 명령했다. 2010년에 조사가 시작된 EU 검색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안 결정은 사실상 다음 EU집행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이 독일 양젤라 메르켈 총리의 핸드폰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차기 디지털 경제 집행위원장이 독일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U 집행위는 구글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 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뒤쳐진 ICT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마존의 무료 배송 서비스가 기존 서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2014년 6월 의회에서 가결되었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우버에 대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15분 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륙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견이 디지털 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시장 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에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산업도 개방과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ICT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유럽 ICT 기업들과의 협력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ICT 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규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¹² Fleur Pellerin works to make France safe for tech startups. (2013.12.19.), *Bloomberg Businessweek*.

¹³ French revolutionary: Is Ex-Con Xavier Niel Europe's Steve Jobs? (2012.3.9.), *Forbes*.

¹⁴ Tech Billionaire Made in France Seeds Paris Entrepreneurs. (2014.6.25.), *Bloomberg*.

¹⁵ Big tech at bay. (2014.9.14.), *Financial Times*.



EU의 에너지 소비 규제

EU Energy Efficiency Directive

On September 1st, 2014, a new guideline for eco-design of vacuum cleaners was introduced in EU market: The electric power consumption of upcoming vacuum cleaners is limited to maximum 1600W; consumers can check the energy efficiency, cleaning performance, dust discharge, and noise level of vacuum cleaners through the new EU energy label. This regulation will be also applied to products sold online from 2015. The power consumption is limited to maximum of 900W from 2017.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guideline, the European Commission expects that, there will be power-saving effect of 19TWh per year in EU by 2020. Energy Efficiency Directive of EU is being strengthened for the sake of global climate protection. While there are some criticism on these policies, EU's effort to regulate energy consump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technical development of manufacturers with regard to energy efficiency.

진공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 규제 시행

EU는 2014년 9월 1일 이후 새로 시판되는 진공청소기 모델에 대한 최대 전력을 1,600W로 규제하고, 에너지 레이블 부착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EU의 이러한 규제는 각각 지난 2013년 7월 8일에 발효된 EU 법령 666/2013과 2013년 5월 3일 발효된 EU 법령 665/2013을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은 2015년부터 온라인 유통제품에도 적용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최대 전력은 평균 1,800W 정도인데, 소비자는 대개 2,000W 또는 2,500W에 이르는 고성능 제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최대 전력이 하향 조정된 제품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는 아직은 이러한 규제에 대해 다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EU,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 목표

EU의 에너지 소비 규제 강화는 글로벌 기후보호 방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U는 지난 2010년 10월에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목표인 'EU 에너지 2020 전략'을 발표했다. '20-20-20 목표'로 통칭되는 이 정책의 핵심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을 최소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20% 증진하며, 총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데 있다. EU는 더 나아가 2020년 이후까지 유럽 에너지 전략 기초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2012년 6월 '에너지 로드맵 2050'을 마련해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85~9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기조하에 EU는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정용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지침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1일 이래 백열전구가 단계별로 판매 금지된 데 이어 도입된 진공청소기 관련 에코디자인 지침은 EU집행위와 산업계, 환경기관 및 소비자연합 등과 사전 조율을 거쳐 도입되었다.

진공청소기에 대한 신(新)에코디자인 지침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공청소기에 대한 규제는 단계별로 적용되는데, 우선 최대 전력을 1,600W로 규제하고 연간 전력소비량은 62kWh로 제한된다. 또한, 카펫과 딱딱한 바닥에 있는 먼지 흡입력에 대한 최소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카펫의 먼지 흡입력은 최소 70%에 달해야 하며, 딱딱한 바닥은 최소 95%여야 한다.

2017년 9월부터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된다. 진공청소기에 허용되는 최대 전력은 900W로 제한되고, 연간 전력소비량 역시 43kWh 이하로 제한된다. 최대 허용 소음은 80dB이며, 딱딱한 바닥의 먼지 흡입력은 최소 98%, 카펫은 최소 75%여야 하며, 먼지 배출량 역시 1%로 규제된다. 모터의 수명은 50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청소기 호스는 최소 4만 번의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¹ 2009년 11월 20일 발효된 에코디자인(Ecodesign) 지침 '2009/125/EG'는 에너지 소비 관련 제품(Energy-related Products)에 대한 친환경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기존의 지침 2005/32/EG를 대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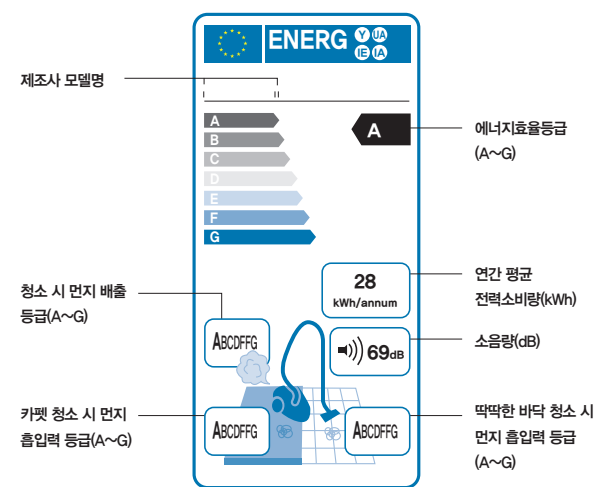
신규 진공청소기에 대한 EU 에너지 레이블

EU의 진공청소기 관련 신에코디자인 지침과 아울러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은 신규로 도입된 EU 에너지 레이블에 등급별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성, 청소 성능, 먼지 재방출량, 소음량 등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대개 청소기 성능을 와트(W) 수치로 평가하는데, W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이는 전력 소비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사용 전력이 얼마나 성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로, 에코디자인 지침의 먼지 흡입력 관련 기준이 진공청소기의 실제 성능을 나타낸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큰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A이며, 알파벳순으로 G등급까지 표기된다. 개별 에너지 효율등급 간에는 6kWh 차이가 있고, A와 G등급 사이에는 36kWh 차이가 난다. 2017년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등급 A+++, A++와 A+가 적용되는데, 이로써 E, F, G등급은 폐지될 예정이다.

★ EU 신규 진공청소기 에너지 레이블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0년 EU 내 연간 총 19TWh 절감 효과 기대

산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규정하에서도 유사한 흡입력을 가진 기술적으로 진보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력이 낮아도 진공청소기의 노즐을 개선하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기기 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한데, 흡입된 공기를 진공청소기 필터만으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 통로를 마련할 경우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U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EU가 이와 같이 진공청소기 에너지 소비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까닭은 이에 따른 전력소비 절감효과가 꽤 있기 때문이다. 독일만 하더라도 연간 판매되는 진공청소기 수가 100만 대에 이른다. EU집행위는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EU 내 연간 총 19TWh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4개의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비자 역시 신규 에너지 레이블을 토대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제품을 쉽게 선별할 수 있고, 전력 소비는 낮으나 성능이 좋은 진공청소기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향후 에너지 소비 규제 지속 강화할 전망

에코디자인 규정은 최상의 제품이 표준을 규정한다는 취지하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기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세탁기는 1995년 이래 EU 에너지 레이블 규정과 최소 표준이 정립되었는데, 에너지 효율등급 A인 세탁기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몇 년간 1,000유로 이상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제조사가 에코디자인 지침 도입 이래 전력 소비량을 감축하는 등 세탁기 성능을 개선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1995년 2%에 불과했던 A등급 세탁기는 현재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기후 보호 차원에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26일부터는 EU 에너지





레이블이 열처리 펌프, 온수기, 난방기기 등에도 의무화 된다. EU는 더 나아가 향후 2015~2017년 규제 시행을 위해 현재 헬스기기, 충전드라이버, 드라이기, 잔디 깎기 기계, 스마트폰, 비디오 프로젝터, 승강기, 비닐하우스, 앰프 등을 비롯하여 30여 개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제품 제조사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900W의 진공청소기의 경우 기술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에너지 소비 규제 강화에 대비

한국 전자제품 수출기업 역시 향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날로 강화되는 EU 에너지 지침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유럽 시장 내에서 한국산 진공청소기는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향후 중소기업 역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혁신 제품으로 틈새시장 공략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EU의 노력이 글로벌 차원의 기후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미래의 선택임을 생각해볼 때, 에너지 규제 강화 방안은 한국에서도 환경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KOTRA 프랑크푸르트 박소영 박사

삶 속의 문화, 음악 in Europe – 유럽 3대 클래식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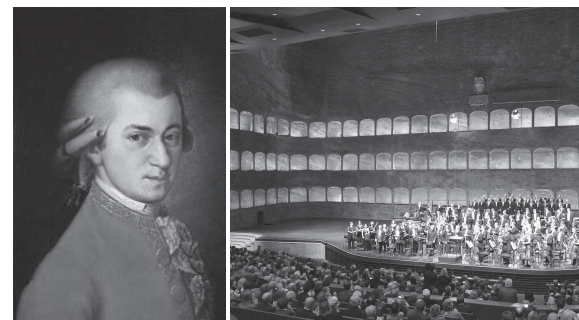
Europe's Three Major Classic Festivals

Classical music has been loved by people for over two centuries because music is both a means for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a common language all over the world. In Europe, the home of classical music, various musical festivals are held around the year. The three most famous festivals in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are Salzburg festival, Bayreuth festival, and Lucerne festival.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해주고, 말이 아닌 음으로 표현하는 세계적 공통어이기 때문에 200년 넘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해마다 음악 축제가 열린다. 유럽인들이 즐기는 클래식 음악 축제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기만 했던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식으로 배우는 클래식 음악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클래식 음악 축제를 소개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3대 클래식 음악 축제로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 루체른 축제가 있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축제

신의 축복이라는 뜻의 '아마테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누나 '난네'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옆에서 화음을 넣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자료: Wikipedia

이후 6살 때 최초로 공식석상에서 연주를 했으며,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를 했다. 잘츠부르크에 가면 연필, 자, 지우개, 벡타이, 양말,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에서 모차르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잘츠부르크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 음악제인 잘츠부르크 축제는 1920년에 시작해서 벌써 100년 가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7월 18일에 시작해 8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에는 매년 28만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니,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한국에서도 메가박스가 잘츠부르크 축제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중계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전국 11개 지점에서 오페라 3개 작품을 단독 중계했다. 그만큼 한국에도 잘츠부르크 축제의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연극부터 솔로 연주까지 다양한 음악 예술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 축제에서 가장 비중 있게 연주되는 장르는 뮌히 뮌히 해도 오페라다. 빈 필이나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연주도 물론 훌륭하지만, 카라얀을 거치면서 오페라가 축제의 중심이 되었다. 카라얀은 이 무대에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공연을 펼치면서 축제의 위상을 높였다.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이 무대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세계 유명 레이블의 스카우터들이 이곳에서 공연하는 신인들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올해 잘츠부르크 무대에 오른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마크-앙드레 달라비외의 〈샬롯 살로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주세페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 조아키노 로시니의 〈라 체네렌톨라〉,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 이었다. 아쉽긴 하지만 한국의 메가박스에서는 이 중에서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8월 4일),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8월 16일),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8월 23일) 등 세 작품만 소개되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다니엘레 가티, 프란츠 빌저되스트 등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환상적인 무대로 오페라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대미를 장식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손꼽히는 〈장미의 기사〉는 그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소피 코흐가 미소녀 ‘옥타비안’을 맡아 남장을 하고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바그너에 의한, 바그너를 위한, 바이로이트 축제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는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연을 하기 위해 극장을 건축하였다. 1850년부터 자신만의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바그너가 1876년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를 공연하면서 바이로이트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후 매년 7월에서 8월에 축제가 열린다. 바그너가 함께 참여한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은 그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사교장이었던 궁정극장의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고대 원형극장처럼



자료: Wikipedia

넓은 아래층에 1974개의 좌석을 배치했다. 관객들은 어느 자리에 앉든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무대 전체를 보고 즐길 수 있었다.

이 축제 극장의 외형적 특징은 객석에서 오케스트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대 밑으로 깊숙이 들어간 오케스트라 박스에 지붕이 덮혀 있는데, 깊은 지하에서 울려오는 오케스트라의 음향은 부드럽게 극장 안을 가득 채운다. 또한 이 극장은 최초로 공연 중에 객석의 조명을 전부 소등한 극장이기도 한데, 조명이 꺼지면 관객들은 더욱 더 무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바그너는 최적의 음향을 위해 건물 전체를 나무로 지었다. 의자와 바닥도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중간 통로 없이 50개 좌석을 일렬로 만들었다. 극장 자체가 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림이 좋다. 반면, 객석 사이가 좁아 더운 날에는 그야말로 찜통이 되기도 한다. 연로한 관객들이 종종 실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71세 노인이 음악극 〈신들의 황혼〉을 관람하던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막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건들 자체가 바이로이트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음악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고 말했던 바그너는 독일의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를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오페라의 대본까지 다 썼을 정도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작곡가다. 전설과 신화에 관련된 주제의 오페라는 독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바이로이트 축제는 우스갯소리로 미친 작곡가, 미친 연주자, 미친 관객의 3박자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미친 작곡가인 바그너를 미치도록 숭앙하는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이 축제에 일종의 숭고미마저 부여한다. 오직 바그너의 작품만 연주되는 이 축제에, 매일 매일 끊이지 않고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이 축제의 표를 구하기 위해 10년 이상 기다린 다음, 바그네리안 정장(Wagnerian Costumes)을 입고 긴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을 즐기는 바그너의 추종자들인 관객들, 바로 그들에게 이 바이로이트 축제는 ‘메카’나 다름없다. 이 성지에서 연주되는 바그너의 음악은 마치 성서처럼 정해진 레퍼토리를 벗어날 수 없다.

매년 동일한 레퍼토리를 엄수하고 있다. 매년 10만 명이상이 모여드는 이 축제는 바그너 음악만을 위해 존재하며, 전 세계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다. 바이로이트 축제의 주요 레퍼토리는 주로 바그너 후기의 오페라 작품들로 이루어지는데, 〈니벨룽의 반지〉전곡,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등이 있다.

호수 위의 관현악 성찬, 루체른 축제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에서 벌어지는 루체른 축제는 잘츠부르크 축제, 바이로이트 축제와는 달리 순수 기악 공연으로만 이루어져 3대 축제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1938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2003년 거장 아바도의 지휘 아래 말러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여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클래식 애호가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이 축제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지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 KKL을 메인 홀로 사용하면서 듣는 아름다움과 보는 아름다움이 결합되어 음악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미술 추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늦여름과 초가을이 만나는 시점에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말러의 전곡을 들려주는 루체른 축제는 유럽 여름 축제의 대단원을 환상적으로 장식한다. 나아가 오직 오케스트라의 연주에만 집중하면서 베를린 필하모니, 영국 로열 필하모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 전 세계에서 최고의 관현악단들이 앞다투어 루체른 축제를 찾아와 마치 세계 오케스트라의 엘도라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76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루체른 축제는 세기의 명장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8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료: Wikipedia

갈라 콘서트로 서막을 장식했다. 로베르트 슈만에 대한 오마주 프로젝트를 필두로 베토벤의 장엄미사, 로시니의 장엄미사, 라이홀트 프리드리히와 마틴 뢰커가 연주하는 트럼펫과 오르간 연주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졌다. 올해는 특별히 관현악에 장엄한 합창곡을 더하였는데, 안드라스 쉬프, 발타사르 노이만 합창단,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바바리안 라디오 합창단, 루체른 아카데미 합창단 등의 아름다운 화성에 루체른 호수를 찾은 전 세계 음악팬들이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상주 오케스트라로 지정된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글로벌 차세대 스타 지휘자인 라트비아의 안드리스 넬슨스, 베네수엘라의 구스타보 두다멜의 하모니는 축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올해 루체른 여름축제의 테마는 ‘마음(Psyche)’으로 설정했는데, 루체른 축제를 오늘날의 위치로 올리고 지난 1월에 생을 마감한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미도리와 소프라노 바버라 헤니건도 “올해의 스타 아티스트(artistes étoiles)” 자격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기분 좋은 점은 진은숙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가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마리아 슈타우트(Johannes Maria Staud)와 함께 상주 작곡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성악가뿐만 아니라 작곡가도 세계 최고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셈이다.

몸으로 추억하는 유럽의 음악축제

유럽 각지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휴가 기간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이 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참가하는 어린이들, 젊은 남녀의 관객들,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음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온몸으로 느끼는 클래식 음악축제는 유럽의 고급문화를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유명 관광지에서 열리는 축제에 내년 여름에는 가족끼리 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

피아니스트 김용진



EU 회원국의 종합혁신지수(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4

Annual IUS is a comprehensive study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U member countries in respect to research and innovation(R&I) capabilities. IUS consists of three areas with 25 indices, and the aggregate index categorises member countries into four groups. The report helps countries to evaluate and determine which aspects to focus on for the enhancement of innovative activities. Despite the effort of such analyses and R&I Programmes like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 the imbalance between countries has not been improved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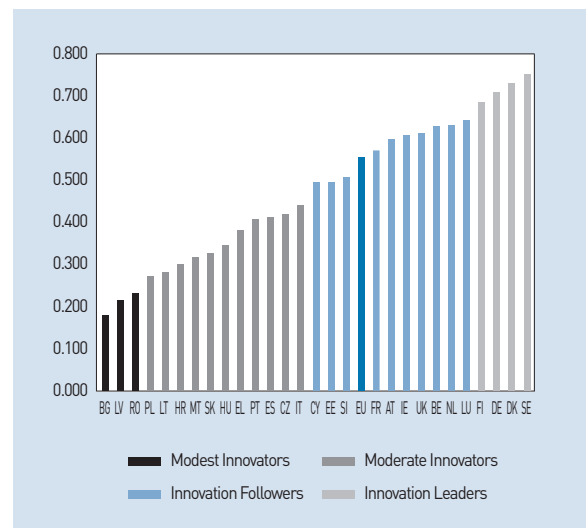
연간 종합혁신지수(IUS)는 EU 회원국의 연구·혁신 역량과 관련된 각국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통합지표다. 이 지표는 회원국들이 국가별 혁신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IUS 보고서는 올해로 13회째 발행되었다. 이번 보고서 역시 이전의 방법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유럽 연합통계청, OECD,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번에 발행된 IUS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의 혁신 지표와 추세를 살펴보았으며, EU 회원국과 10개의 국제적 경쟁국들을 비교하였다.

IUS 분석 지표는 총 3개 분야와 2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분야는 투입요소(Enablers), 기업 활동(Firm activities), 성과(Outputs)로 구분되어 있고, 25개의 세부지표는 대학교육 이수자, R&D 투자액, 논문 수, 특허 수, 중소기업 수, 국제논문 수, 중소기업협력, 산학협력 등의 항목이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표를 토대로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EU 회원국의 평균점수 대비 20% 이상 높은 혁신 선도국(Innovation Leaders)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이 이 그룹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은 EU 회원국 평균점수의 90~120%에 속하는 혁신 후발국(Innovation Followers)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그룹은 EU 회원국 평균점수의 50~90%에 속하는 상대적 후진국(Moderate Innovators)으로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이 이 그룹의 국가들이다. 마지막 그룹은 EU 회원국 평균점수의 50% 미만에 속하는 혁신 낙후국(Modest Innovators)으로 불가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IUS 분석 지표 기준에 따라 EU 회원국의 순위가 발표됐는데, 스웨덴이 EU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가 독일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각 그룹의 순위를 살펴보면, 혁신 후발국 내에서는 룩셈부르크가 네덜란드를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상대적 후진국 그룹에서는 포르투갈을 추월한 스페인에

★ EU 회원국의 종합혁신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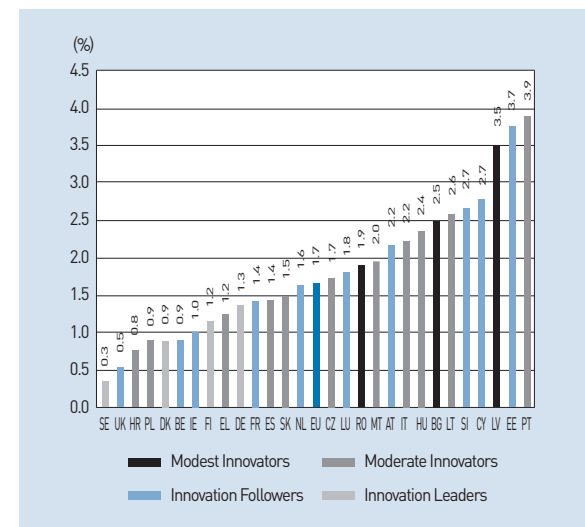


주: IUS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토대로 0부터 1까지의 범위로 측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앞서 이탈리아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혁신 낙후국 그룹에서는 루마니아가 라트비아를 앞지르며 상대적 후진국으로 한발 다가섰다. 순위가 가장 크게 변한 국가는 폴란드인데, 혁신 낙후국가에서 상대적 후진국으로 그룹이 바뀐 유일한 나라다.

종합혁신지수 성장률을 살펴보면,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순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논문 국제공저, 외국인 박사인력,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권 수, 기업 R&D 투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그리고 크로아티아 순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10년의 종합혁신지수 대비 가장 큰 순위 변동을 보인 국가는 영국(5위→8위)이다. 영국의 순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부지표는 라이선스 및 해외 특허 매출(License and patent revenues from abroad)인데 무려 274점¹에서 -88점으로 떨어졌다.

★ EU 회원국의 종합혁신지수 성장률



주: 지난 8년간(2006~2013)의 종합혁신지수(IUS) 성장률 평균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¹ EU 회원국의 평균 점수가 100인 기준으로 작성

본 보고서에서는 EU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의 혁신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이 가장 우수한 혁신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미국, 일본, EU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EU보다 민간 R&D 투자(2.13배), PCT 특허권 수(1.59배), 대학교육 이수자(1.42배) 등 8개 지표에서 앞서고, 특허 특허증가율(13.7%)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논문 인용도(0.82배), 국제 공저(0.97배), 라이선스 및 해외 특허 매출(0.52배)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유럽의 R&D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뒤를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기술 강국이 규모의 R&D(Scale of R&D)를 바탕으로 유럽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07년부터 이루어진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과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EU는 지난 수년간의 경제 및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2010년에는 유럽 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 전략의 추진과정을 검토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재선정하기 위해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을 모으고 있다. 유럽 2020의 핵심 전략인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혁신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Horizon 2020, Eureka 등 EU 차원의 R&D 정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EU 회원국의 혁신역량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uropean Commission (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

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3차 한-EU 협력 포럼 세미나 개최 The 3rd Regional Diversity & Growth Forum

On September 19th,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eld the 3rd Korea-EU Cooperative Forum & Seminar, entitled <Culture and Music of Life in Europe>. In this seminar, pianist Yongjin Kim, who is well known in Korea for his classical music performance and open lecture, gave a discourse about the history of classical music that is reflected in classic festivals held in Europe every year as well as the life and culture of European people.

지난 9월 19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삶 속의 문화, 음악 in Europe>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한-EU 협력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클래식 음악 연주와 공개 강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용진 피아니스트가 매년 유럽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역사와 더불어 유럽인의 삶과 문화에 대해 강의를 했다.

